

국책 공모사업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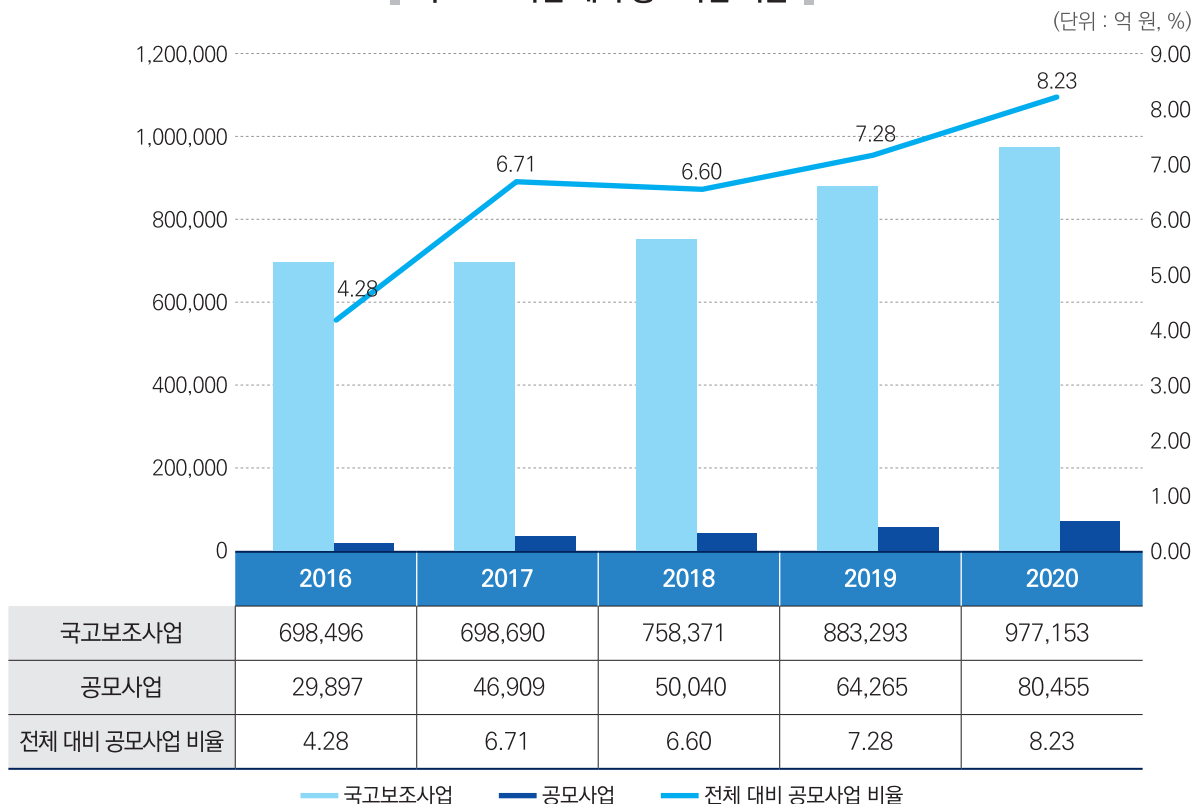
국책 공모사업체계의 개선 필요

- 국책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의존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제도의 한 형태임
- 그러나 국책 공모사업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 규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둘째, 지역 인프라와 재정력 차이로 인해 공모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셋째,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따라서 국책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 사업규모 및 수, 선정 기관의 특성 등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국책 공모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국책 공모사업의 운영 실태

- 2020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97조 7,153억 원이며, 이 중 8조 455억 원(8.23%)이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출처 : 행정안전부, 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은 2016년 4.28%에서 2020년 8.23%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음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를 고려하면 공모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2019년 기준 수도권 73개, 비수도권 88개)
- 그리고 국책 공모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보다 낮은 편이며, 2020년 기준 공모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3.1%인데 반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67.1% 수준임
 - 국책 공모사업 공고 시 지방비 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진행된 44개 국책 공모사업 중 구체적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제시된 사업은 19개에 지나지 않음
- 국책 공모사업 선정 시 심사기준 또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과 계획성,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국책 공모사업 선정 시 심사기준 또는 평가항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44개 중 7개(15.9%)로 나타났음

▣ 대형 공모사업 평가기준(예시) ▣

평가기준	대형 공모사업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시범도시 (2007년)	첨단의료 복합단지 (2009년)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2015년)	소방복합 치유센터 (2018년)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2019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018년)	스타트업 파크조성 (2019, 2020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2020년)	K-바이오 랩허브 (2021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2021년)
사업목적 달성 (적정성) 및 계획성	√			√		√	√	√	√	
입지여건 적합성		√	√		√		√	√	√	√
과제 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평가)				√						
재원조달의 용이성	√							√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	√	√		√	√			√	
개발 용이성, 부지 확장성	√								√	√
접근성		√	√			√	√		√	
정주여건			√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협업 역량		√	√	√	√	√				
신청기관 추진의지, 지자체 지원	√	√	√	√	√	√			√	√
환경영향	√								√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	√		√
주민 수용성			√						√	
선정 지역	인천	대구·경북, 충북	대전	충북	경북	대전	인천, 대전	경남	인천	충북

출처 : 각 공모사업 신청 공고안 참조

국책 공모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

지방비 부담 완화

- 2019년 기준 국책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일반 국고보조사업보다 약 1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 지방비 부담률은 약 55%로 2조 3천억 원 규모임
- 대부분의 경우 공모사업 공고 당시 5:5의 매칭 비율일지라도 선정을 위해서 더 높게 써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 부담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

- 대형 공모사업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며, 단순히 지방비를 더 높게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는 등의 재원분담 불균형 행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공모사업 평가항목 개선

-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항목에 지역 균형을 위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공모사업 평가항목에 있어서 지역 인프라 우수한 재정력을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에 관한 고려가 부족함
 - 평가항목에서 지역감소지역을 고려한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유일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은 지방비 부담률 자체를 재정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이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선정기준 객관성 제고

- 공모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를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사전 준비기간 제공

-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지방자치단체 준비기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44개 국책 공모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최소 1주일(국민참여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행정안전부)에서 최대 12주(지역에너지 절약사업-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르기까지 공고 기간이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단순히 1~2주 등 공고기간이 주어졌을 때, 예산부서와의 검토 없이 공모사업이 진행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음
 - 또한 사전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기존 인프라와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잘 작성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 정보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홍근석·이서희(2021).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 공모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원문 보기

내용문의 이서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eotae10@krila.re.kr, 033-769-9873)

지난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박진경 연구위원)

원문 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